

이슈브리프

# ISSUE BRIEF

발행일 2018년 07월 26일



## | 금주의 이슈 |

- I. 탈원전 부메랑으로 돌아온 전력수급 논란 / 3
- II. 그녀들은 왜 분노하는가? / 9
- III. 북핵 협상 과정에서 '중국 배후론'의 실체와 전망 / 15

# 금주의 이슈

2018. July 제 14 호

금주(7월 넷째 주)는 에너지·여성·안보 분야에 관한 3편의 이슈를 다루었음.

제1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력수급 문제를 살펴보았으며, 제2편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뉴페미니즘의 시각과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봄. 이어 제3편에서는 북핵 협상과정에서 ‘중국 배후론’의 실체와 전망에 대해 연구하였음.

## 제1편 \ 탈원전 부메랑으로 돌아온 전력수급 논란

- 장경수 선임연구원

연일 계속된 폭염에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文정부의 탈원전 정책 고집으로 인한 전력난이 가시화되고 있음. 이에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며 대체 에너지를 갖추지 못한 채 밀어붙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이에 따른 전기료 인상 우려를 지적하고, 탈원전을 선언하고도 기본적인 전력운용에서 여전히 원전으로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자기모순적인 상황을 비판할 필요가 있음

## 제2편 \ 그녀들은 왜 분노하는가?

- 노명순 연구위원

강남역여성살인사건, 미투운동, 홍익대누드모델몰카사건과 경찰수사논란, 스튜디오성추행과 불법촬영 사건이 이어지며 생물학적 여성만 모이는 여성시위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음. 여성 이슈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정치현실에서 여당과 야당, 좌파와 우파 어느 곳에서도 수용되지 않는 2030 여성집단이 대두되고 있음. 기존의 어느 정치세력과도 연대하지 않고 등장한 이들을 모이게 한 동력은 분노이며, 기성세대에 대한 적대감이 강함. 이들의 분노를 이해하고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제3편 \ 북핵 협상 과정에서 ‘중국 배후론’의 실체와 전망

- 이윤식 연구위원, 김진솔 연구원

<싱가포르 회담> 이후 어렵게 성사된 美北 협상에서 폼페이오가 ‘빈손 귀환’을 하면서 美 언론 및 조야를 중심으로 트럼프의 협상력과 북한 시간끌기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제기. 이에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북제재 완화카드를 대응하면서 북한 배후에서 북핵 협상을 조정한다며 ‘중국 배후설’을 경고하고 나섬.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선 美中 무역갈등 속에서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의 본질.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북핵 폐기 전략을 촘촘히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



# I . 탈원전 부메랑으로 돌아온 전력수급 논란

작성: 장경수 선임연구원 ☎02-6288-0535

연일 계속된 폭염에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文정부의 탈원전 정책 고집으로 인한 전력난이 가시화 되고 있음. 이에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며 대체 에너지를 갖추지 못한 채 밀어붙이는 文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이에 따른 전기료 인상 우려를 지적하고, 탈원전을 선언하고도 기본적인 전력 운용에서 여전히 원전으로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자기모순적인 상황을 비판할 필요가 있음

## 1 폭염에 급락하는 전력예비율

- ◆ 24년 만에 닥친 폭염으로 전력수급에 빨간불
  - ▶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전기사용이 급증하면서 24일 오후3시 전력예비율이 7.5%(692만kW) 까지 급락하며 최대전력수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 ▶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4일 전력수요가 9177만kW를 기록해 전날의 9070만kW를 넘어섬

〈표 1〉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과 보유세 부담 변화(예시)

	7.17	7.18	7.19	7.20	7.23	7.24
전력 예비율(%)	12.5	12.7	11.8	10.7	8.4	7.5

자료 : 전력거래소

- ▶ 예비력이 500만kW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되며, 500만kW부터 100만kW 단위로 ‘준비-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 순으로 발령됨

## 2 탈원전 부메랑으로 돌아온 전력수요 예측실패

### ◆ 전력수요 수급 예측에 실패한 정부당국

- ▶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최대전력수요가 연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내다본 2.2%에 비해 전력수요 증가폭을 다소 낮춘 바 있음
- ▶ 또한 지난 5월 발표한 하계전력수급대책에서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를 8830만kW로 예상하고, 발생시점도 8월 중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시기와 예측치가 모두 빗나감

### ◆ 탈원전 정책 고집으로 인한 전력수요량 과소추정

- ▶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자력 발전용량을 지난해 22.5GW에서 2030년에는 20.4GW로 줄이기로 한 상태
- ▶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6기에 대한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10기(8.5GW)의 기존 원전은 설계수명이 끝나면 가동을 허가하지 않을 예정
- ▶ 이는 정부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불허, 신규 원전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수요를 낮춰 잡은 것이 이 같은 전력수급 불안을 초래

### ◆ 그럼에도 전력공급에 차질 없다는 정부 입장

- ▶ 8차 전력수급계획상 전력수요예측을 보면 이미 지난 1월 잘못된 수치를 내놓았으며, 정부는 여전히 탈원전으로 전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단순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음

## 3 文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 ◆ 대안없이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

- ▶ 현 정부는 전력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및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을 간과
- ▶ 전기료는 정부 주요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등에 큰 영향을 미침
  - ※ 누진제가 3단계로 개편된 2016년 당시 한국은행은 8~9월 물가상승률이 각각 0.4%p씩 떨어졌다고 밝힘

- ▶ 원전을 중단했던 미국, 영국, 일본, 대만 등도 전력수급 차질과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중단했던 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원전 건설을 재추진하고 있음
  - ※ 현 정부 모델인 독일(신재생 30%)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전기요금이 226% 인상(OECD 평균의 2.3배, 우리나라의 3.6배)되었으며, 독일 중소기업 75%가 기업경영의 주요 위협요소로 비싼 전기요금을 지적

◆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

- ▶ 미국은 주요 에너지를 원자력으로 회귀하고 있고, 중국은 세계 최다 원전국이 되어가고 있으며,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기준으로 원전 9기를 재가동함

국가	내용
스웨덴	- 1980년 투표로 탈원전 결정하였으나 현재 원전의존도는 33%에 육박 - 정치권에서 국가 실익을 따져가며 원전 폐쇄 연기
일본	- 원전사고 직후 제로정책에서 원전기본 전력구조회 회귀 - LNG로 엄청난 무역적자, 2030년까지 전체전력의 22%를 원자력에서 충당
독일	- 태양광(약 40GW), 풍력(50GW) 발전 확장에 막대한 자금 소비로 인해 전기료가 탈원전 이전의 약 3.3배 상승
프랑스	- 세계에서 원전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78%)
영국	- 원자력을 기본전력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미국	- 트럼프대통령은 원자력을 미래 주요 에너지원으로 지명

◆ 생산단가 높은 LNG전력 구매 증가로 전기료 인상 우려

- ▶ 정부는 전력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발전소를 우선 가동하고, 전력 수요가 많아지면 LNG발전소의 전기를 싸게 되는데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2016년 1kwh당 76.1원이었던 SMP(계통한계가격)는 최대치 기준 지난해 80.3원에 이어 지난 24일에는 99.85원까지 상승함에 따라 한국전력은 이미 1분기에 1,200억원, 2분기 5,0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되고 있음

- ▶ 결국 전력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초기가동에 시간이 걸리는 다른 발전방법보다 전력생산 단가가 비싼 LNG발전을 가동하는 것

## 4 정책적 시사점

- ◆ 백년대계(百年大計): 원자력발전은 국가 에너지 프로젝트의 중심
  - ▶ 에너지 정책은 국민 개개인은 물론 사회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변경은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합의 도출이 선결되어야 함

〈표〉 탈원전 추진 국가의 추진 방식과 기간

국가	방법	논의기간
독일	에너지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개정된 '원자력법' 의회 표결	25년('86 - '11)
스위스	국민투표(5차례)	33년('84 - '17)
벨기에	'점진적탈원전에 관한 법률' 의회 통과	4년('99 - '03)
한국	대통령 공약에 따른 정부의 일방추진 및 졸속결정	3개월

- ◆ 회귀(回歸): 탈원전 정책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원전가동률
  - ▶ 현 정부 출범 직전인 작년 5월초 원전가동률은 76.4%였으나, 탈원전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올 3월 54.8%로 최저치를 기록
  - ▶ 이후 4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달 말 기준 67.8%까지 회복하였고, 다음달에는 현 정부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인 70% 중반까지 오를 전망
  - ▶ 이는 지난 20일 재가동된 한울4호기가 24일 정상출력에 도달하고, 지난 22일 한수원이 여름철 전력수요대응을 위해 계획예방정비 중인 한울2호기와 한빛3호기를 조기 재가동하기로 했기 때문 (현재 24기 중 16기 가동되고 있고, 8월에는 18기가 가동될 예정)

◆ 모순(矛盾): 결국 정부가 택한 방법은 원자력발전

- ▶ 정부가 원전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탈원전의 필요성만 과도하게 주장하면서 국민적 분노와 오해를 일으킴
- ▶ 현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고도 기본적인 전력운용에서는 여전히 원전으로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
- ▶ 전력공급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결국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와 연계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해야 함





## II. 그녀들은 왜 분노하는가?

작성: 노명순 연구위원 ☎02-6288-0525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미투 운동,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과 경찰수사 논란, 스튜디오 성추행과 불법촬영 사건이 이어지며 생물학적 여성만 모이는 여성시위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음. 여성 이슈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정치현실에서 여당과 야당, 좌파와 우파 어느 곳에서도 수용되지 않는 2030 여성집단이 대두되고 있음. 기존의 어느 정치세력과도 연대하지 않고 등장한 이들을 모이게 한 동력은 분노이며, 기성세대에 대한 적대감이 강함. 이들의 분노를 이해하고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II. 그녀들은 왜 분노하는가?

### 1 젊은 여성층의 자각과 결집

◆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 조현병에 의한 범죄 vs. 여성혐오 범죄

- ▶ 2016년 강남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국내 페미니즘을 활성화시킨 중대한 사건으로, 한 사건에 대한 남녀간의 큰 시각차를 드러냄
- ▶ 조현병에 의한 범죄
  - 범인은 정신분열증으로 4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는 조현병 환자인데, 경찰은 조현병에 의한 일종의 ‘묻지마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림
- ▶ 여성혐오 범죄
  - 범인은 “여자들이 날 무시해서 죽었다”고 언급, 사건당시 남자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가만히 숨어 있다가 여자가 들어오자 살인
  - ‘나는 운 좋게 살아남았다’는 젊은 여성층의 추모글이 SNS로 확산되면서 각자 여자로서 겪은 크고 작은 폭력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것’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됨
  -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젊은 여성층의 분노의 공감대 빠르게 형성
- ▶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자 잠재적 피해자이며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구도 형성되면서, 남녀 성 갈등 양상 본격화

◆ 역대 최대 규모의 여성 시위

- ▶ 홍익대 미대 누드모델 불법촬영(몰카) 사건은 혜화역 시위의 도화선
  - 경찰은 수사 의뢰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20대 여성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했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다른 몰카 사건과 달리 언론에 노출되었으며, 이는 성차별 수사 논란으로 확산
  - 몰카 범죄 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수많은 여성에 대해서는 수사가 그렇게까지 친절하고 신속하지 않았다는 분노의 공감대 형성
- ▶ 포털사이트 다음의 여성 카페인 ‘불편한 용기’<sup>1)</sup>가 5월부터 서울 혜화역에서 주최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는 7월 7일 3차 집회까지 건국 이래 여성만 모인 시위로는 매번 최대 규모 기록(주최 측 집계, 2만-4만5천-6만) 경신<sup>2)</sup>
- ▶ 이제 페미니즘은 모두가 한 마디 하는 정치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 2 페미니즘과 뉴페미니즘

◆ 페미니즘(feminism)

- ▶ 페미니즘이란 성 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시각 때문에 여성이 억압받는 현실에 저항하는 여성해방 이데올로기이자 정치적 실천운동
- ▶ 남녀간의 차이를 인정하되 남녀 차별을 타파하자고 주장하는 페미니즘은 여성이 겪고 있는 성차별 구조에 대한 저항이지 남성에 대한 공격은 아님

◆ 뉴페미니즘(new feminism)

- ▶ 이전의 페미니즘에서 생물학적 여성을 부각하는 것을 금하고 엘리트식 설득의 언어를 구사한 것과 달리,
- ▶ 남성을 배제하며 결집하는 선명성 부각하고, 여자가 당한만큼 되돌려준다는 방식의 미러링(mirroring)과 같은 반격의 언어 구사
- ▶ 뉴페미 혹은 영페미라고 불리는 이들은 2030 여성이 주축이며,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같은 여성이라는 ‘자매애’로 결집

---

1) 성평등을 위해선 세상이 불편할 정도로 용기를 내야 한다는 뜻

2) 참가 자객은 ‘생물학적 여성’에 한정되며, 운영진은 다음달 4일 서울 광화문에서 4차 집회 계획

- 혜화역 시위를 주최한 다음 카페 '불편한 용기' 운영진 100여 명의 경우 서로 여성이라는 것 외엔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음
- 제3자의 시선에 신경쓰지 않는 이들은 자발적·산발적·유동적

### 3 혐오전쟁: 여성혐오 VS. 남성혐오

#### ◆ 일베를 중심으로 먼저 형성된 여성혐오

- ▶ 극우·여혐·반호남을 기치로 내건 일베를 중심으로 남성의 사회적 좌절을 여성에게 분풀이하는 프레임 형성<sup>3)</sup>
  - 모바일 게임을 하는 남성이 게임 작가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퇴출을 요구했고 결국 그 작가는 계약 해지
  - 대학 내에서 페미니즘 강연이 취소되거나 대자보가 찢기기도 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신지예 녹색당 후보의 선거벽보는 많은 곳에서 훼손
  - 여성 연예인은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격받음

#### ◆ 더욱 거칠고 극단적인 남성혐오 등장

- ▶ 이 같은 여혐 콘텐츠에 맞서 등장한 것이 '워마드(Womad)'<sup>4)</sup>의 남혐 콘텐츠
- ▶ 상대의 문제 행동을 거울에 비추듯 따라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미러링<sup>5)</sup>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 ▶ 최근 홍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사진, 가톨릭 성체 훼손 사진, 태아 훼손 사진 등이 게시되고 유아 납치 예고 등 반사회적 표현을 일삼아 대중의 반발을 사고 있음

### 4 왜 분노하는가?

#### ◆ 참을 수 없는 분노

- ▶ 3차까지 진행된 혜화역 시위를 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고, 확대되고 있음

3) 김치녀(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말), 삼일한(한국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말을 듣는다) 같은 혐오 표현은 기본이고, 일반인 미성년자 사진을 올려놓고 성적 대상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술 취한 여성에 대해 집단 강간을 공개 모의하기도 함. 최근에는 일베 문화가 일부 인터넷 1인 방송으로 옮겨왔고, 이들의 여혐 발언을 초등학교생들이 따라 하기도 함

4) 극단적인 남성혐오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5) 김치녀, 삼일한 등 여성 비하 용어를 뒤집어 콩치남(돈 안 쓰는 치졸한 남자), 숨실한(한국 남자는 숨 실 때마다 한 번씩 패야 한다)이라고 표현하는 식

- ▶ 그간 사회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이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는데, 젊은 여성층의 목소리는 남성혐오도 거침없이 표현할 정도로 선배 여성들보다 훨씬 더 분노에 찬 표현으로 터져나오고 있음

◆ 역사상 최고의 혜택을 받은 여성세대 등장(알파걸<sup>6)</sup>)

- ▶ 남아선호사상이 희석되고 남자형제와 동등한 교육기회 속에서 여성 대다수가 대학교육 혜택을 받으며 과거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
  -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리나라 여학생은 사상 처음으로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보다 우수한 성적 취득함. 읽기 능력은 물론이고 직전 평가인 2012년까지는 남학생이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여학생보다 성적이 더 좋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여학생이 앞서는 결과가 나옴

◆ 젊은 남성세대의 위축(베타보이<sup>7)</sup>)

- ▶ 알파걸이 교실을 휘어잡는 상황과 '여성은 배려해야 할 약자'라는 사회적 통념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고, 여성 때문에 역피해를 당한다고 분노하는 젊은 남성층이 여혐문화를 활발하게 생산·소비
- ▶ 이런 상황에서 젊은 여성층은 성차별이나 혐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상화된 몰카에 대한 공포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공감대 형성

◆ 매우 민감하고 갈등 수위가 높아진 남녀 갈등

- ▶ 남북·동서·계층·연령 등 갈등 전선에 '남녀' 이슈도 급부상
- ▶ 여당과 야당, 좌파와 우파 어느 곳에서도 수용되지 않는 2030 여성집단은 기존의 어느 정치 세력과도 연대하지 않고 등장
- ▶ 해화역 시위에서는 현 정부 지지층으로 알려진 2030 여성들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
  -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편파수사는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자극제가 되어 시위에서 대통령 발언 규탄하는 퍼포먼스와 구호 등장<sup>8)</sup>

---

6) 그리스 알파벳의 첫 자모인 알파( $\alpha$ )에서 유래된 것으로 '첫째가는 여성'을 의미하는 알파걸은 공부, 운동, 대인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또래 남학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과를 보이는 여성을 지칭

7) 알파걸의 선전에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학업이나 취업 면에서 뒤처지며 상대적 열등감에 시달리는 남성을 의미. 실제로 중고교 진학시 남학생은 여학생과 달리 내신성적 관리에 있어 남녀공학이 매우 불리하다고 인식하고 가급적 피하려고 함

8) 집회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을 향해 "재기해"라고 외쳤는데, '재기해'는 여성이 한국 남성을 비판할 때 "자살하라"는 의미로 쓰는 말이며, 한강에 뛰어 내려 숨진 남성연대 고(故) 정재기 대표의 이름에서 따왔음

## 5 대응방안

### ◆ 여성 이슈에 대한 당의 인식 전환

- ▶ 우리 사회가 젊은 여성층의 목소리에 미온적으로 반응하면 이들의 성난 시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 ▶ 현재 여성 이슈에 대한 당의 인식은 무관심과 둔감
- ▶ 당에 대해 여성층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소위 ‘개저씨’<sup>9)</sup>로 표현되는 심각한 꼰대 이미지

### ◆ 페미니즘에 대한 당의 첫걸음은 관심과 공감이어야 함

- ▶ 그리고 페미니즘 감수성<sup>10)</sup>기르기
- ▶ 위계·통제·지배 등 가부장적 질서 말고, 숫자로 계량화할 수 있는 양성평등 말고, 권력질서 자체의 변화를 수용하는 감수성 필요

### ◆ 분노와 혐오는 구별

- ▶ 분노는 상대방과 나의 상호작용 속에 담긴 저항적 행위이나, 혐오는 사회적 병리현상의 일부
- ▶ 최근 인터넷 사이트 워마드를 중심으로 등장하는 과격한 표현은 페미니즘의 탈을 쓴 혐오일 뿐 분노가 아님
- ▶ 그러나 젊은 여성층이 공감하는 분노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

### ◆ 우리 사회에 대한 당의 비전 정립

- ▶ 그동안 당에서 우리 사회에 제시한 비전이 부강한 나라, 잘사는 나라 등 ‘양적 성장’와 ‘국가’에 점을 두었다면,
- ▶ 이제는 삶의 ‘질’과 좋은 ‘사회’에 대한 비전 필요
- ▶ 여성과 남성이 분리되어 서로를 혐오하는 혐오현상은 단호히 대처하되,
- ▶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는 ‘좋은 사회’의 비전 제시

9) 개념 없는 아저씨 또한 나이나 지위를 앞세워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중년 남자를 의미함. 수해 봉사 현장에서도 신겨줘야 하는 홍준표의 장화, 수행비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김무성의 노룩패스 등이 이런 이미지로 국민에게 보여졌음

10)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체화된 남성중심의 세계관에 대한 자각과 각성, 수평적 질서를 만들어가는 감수성



# III. 북핵 협상 과정에서 '중국 배후론'의 실체와 전망

작성: 이윤식 연구위원, 김진솔 연구원

〈싱가포르 회담〉 이후 어렵게 성사된 美北 협상에서 폼페이오가 '빈손 귀환'을 하면서 美 언론 및 조야를 중심으로 트럼프의 협상력과 북한 시간끌기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제기. 이에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북제재 완화카드로 대응하면서 북한 배후에서 북핵 협상을 조정한다며 '중국 배후설'을 경고하고 나섬. 그러나 우리 입장에선 美中 무역갈등 속에서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의 본질.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북핵 폐기 전략을 촘촘히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

## 1 난항을 겪는 미북 협상

- ◆ 〈싱가포르 회담〉 이후 한달 만에 성사된 미북 협상에서 폼페이오가 '빈손 귀환'하면서 북핵 협상의 어려움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
  - ▶ 폼페이오 3차 방북(7.6~7)의 목적은 △김정은과 면담, △FFVD 설명, △북핵 신고였으나, 비핵화 논의는 커녕 김정은과의 면담도 불발
    - ※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로 폼페이오가 3차 방북 前 제시한 비핵화 개념
  - ▶ 특히, 양측은 북한 비핵화의 개념과 방식부터 신고→사찰→검증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 그리고 미북간 관계개선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슈에서 이견을 표출
  - ▶ 즉,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신고 및 검증을 전제로 한 '일괄타결' 방식을 요구한 반면, 북한은 초치일관 '단계적 동시행동' 방식을 고수하며 반박
  - ▶ 또한, 양자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은 비핵화 후속 조치가 우선이란 점을 강조한 반면, 북한은 다방면의 교류와 종전선언이 핵심이라고 주장



- ◆ 더 큰 문제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미 송환을 약속한 미군 유해송환도 난항에 빠져 북핵 협상으로 연동되지 못하는 상황
  - ▶ 미국측은 6.23(土) 유해 송환을 위해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100여개의 나무상자를 전달했으나,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구의 유해도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음
  - ▶ 한편, 북측은 사전 통보 없이 유해송환 실무회담(7.12)에 불참하고도 장성급 회담(7.15-16)을 역제안하는 등 미국과 실무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구태를 반복
    - 결국, 장성급 회담에서 7.27(金)에 미군 유해 5,300구 중 200구 송환에 합의했으나, 이 역시 실제 진행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
- ◆ 미북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美 언론과 조야를 중심으로 트럼프의 협상력과 북한의 시간 끌기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대두
  - ▶ 주류 언론인 뉴욕타임스(NYT)나 워싱턴포스트(WP)는 물론 대표적 親트럼프 언론으로 분류되는 폭스뉴스 조차도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
    - ※ 폼페이오의 빈손 방북으로 미국은 현재 △北 핵시설 폭격, △최대압박 정책으로 회귀, △北 핵보유국 인정 등의 기로 직면했다고 비판
  - ▶ 미국 내 전문가들 역시 ‘북한의 시간 끌기로 비핵화 협상이 함정에 빠졌다’라고 평가하며, 트럼프는 과거 美 행정부의 대북 협상 실패를 재연하고 있다고 지적

〈표 1〉싱가포르 회담 4大 합의 진척상황

조항	주요 내용	북한	미국
1조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反美 선전 감소 및 대화 지속 의사 유지	폼페이오 장관 3차 방북 통한 관계 개선 노력
2조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핵·미사일 공개 실험 일시 중단	한반도 전략자산 未전개 및 한미연합 군사훈련 유예
3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 검증대상 및 이행시기 결정을 위한 구체적 성과 도출에 실패	
4조	미군 유해 즉각 송환	북측의 불참으로 실무회담(7.12) 무산 장성급회담(7.15-16)에서 유해 200구 송환에 합의	

\* 주: 동아일보 기사(2018.7.12.) 참고 및 수정

## 2 '중국배후설'의 실체

- ◆ 트럼프 대통령은 진전없는 북핵 폐기 협상에 '중국 배후설'을 제기하며 공개적 비판에 나섬
  - ▶ 트럼프는 “중국이 대북 영향력 활용해 비핵화 협상과정에 개입, 미국과 무역전쟁의 지렛대로 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 (7.9, 트위터)
    - ※ 5.22(火) 트럼프는 “다롄회동(2차 방중, 5.7-8) 직후 달라졌다”고 ‘중국배후설’을 제기하며, 미북회담을 전격 취소한 바 있음
  - ▶ 또한, 親트럼프 성향의 린지 그레이엄 美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도 “중국이 김정은에게 對美 강경노선을 취하라고 압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 (7.8, 폭스뉴스)
  - ▶ 현재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북제재 완화카드로 대응하며 북한의 배후에서 북핵 협상을 조정한다는 ‘중국 배후설’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상황
- ◆ 우선, 북중관계가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밀월 수준’으로 회복되며 상대적으로 미북간 비핵화 협상 동력이 약화
  - ▶ 북핵·미사일 도발로 장기 경색 중이던 북중관계는 최근 3번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복원을 넘어 한단계 격상됐다는 평가
    - ※ 3차 북중회담(6.19)에서 시진핑 주석은 “정세 변화도 북중 관계 불변”을 약속하며 북한과의 전통적 혈맹 관계임을 적극적으로 과시
  - ▶ 문제는 북한이 북중관계 복원 이후 표면적으로 對美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지만, 속내는 비핵화 협상에서 시간끌기를 통한 주도권 확보를 노리고 있다는 점
- ◆ 이와 함께, 중국이 안보리 제재를 느슨하게 가동시킴으로써 대북 경제적 압박수단 약화 및 北中 군사 협력 움직임도 포착
  - ▶ 6.22(金) 트럼프는 대북제재 1년 연장에 서명했지만, 북중 접경 교류 등 중국의 대북제재 공동전선 이탈로 북한 압박의 최대수단 동력이 상실
    - ※ 7월 북한 휘발유 값이 14% 하락(1.26유로→1.1유로)했고, 중국 內 북한産 해삼이 유통되는 등 中 당국의 제재 감시 완화를 방증
  - ▶ 최근 北 노동자 500여명이 중국으로 파견됐고, 약 5,000명의 북한 무역상의 접경지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통제에 나서지 않으면서 북한의 숨통을 열어주고 있음
    - ※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제8항: “외국에서 근무하는 기존 북한 노동자의 24개월 內 귀환조치 및 신규채용 금지”
  - ▶ 한편, 북한군의 기술로는 탐지 불가능한 美 고고도 정찰기에 대한 정찰 정보를 中 최고위층이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北中이 군사협력까지 진행시키려는 모양새

- ◆ 무엇보다 美中 통상 마찰 속에서 북한 비핵화는 점점 더 요원해짐
  - ▶ 美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7.6(金) 美 통상법 301조에 의거,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産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
    - ※ 통상법 301조(Super 301):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관세인상, 수입규제, 무역공여 혜택을 중단하는 제재 권한을 규정
  - ▶ 이에 중국은 같은 규모의 보복관세로 대응했으나, 미국은 중국의 조치에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품목을 발표하며 양국의 관세전쟁이 심화
  - ▶ 최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에 美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환율전쟁으로의 확전을 시사
    - ※ 7.24(火) 中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을 1달러당 6.7891위안으로 고시, 이는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 절하
  - ▶ 美中 무역전쟁이 심화될 경우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중국과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양자 사이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북한의 이해 등이 맞물려 美北 협상의 공전은 불가피할 전망

### 3 향후 전망

- ① 북한의 ‘지연전술’로 비핵화 협상의 장기화 가능성
  - ▶ 북한의 체제적 특성을 감안할 때, 핵무기 및 핵시설의 신고, 사찰, 검증 등 세부사항을 ‘워킹그룹’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
    - 폼페이오 3차방북 당시 미국의 실무팀 구성 요구에 북측은 “실무팀이 구성되더라도 김영철 등 워킹그룹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함
  - ▶ 북한은 11월 美 중간선거까지 ICBM 폐기 등 미국 본토 위협만 제거하는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통해 ‘시간 끌기’에 집중할 전망
  - ▶ 결국 비핵화 협상은 길고 지루한 늪에 빠지게 될 것이며, 비핵화는커녕 핵동결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만 수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
- ② 미중 무역전쟁으로 비핵화 협상의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
  - ▶ 미중 모두 국내정치적 상황 때문에 무역전쟁을 적정선에서 종료할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군사적·국제정치적 패권이 걸린 사안이라 확전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
    - ※ 현재 중국은 국방비 197조원(세계 2위), 병력 218만명(세계 1위), 잠수함 66대(세계 1위) 등 강군건설을 위한 ‘군사굴기’를 강력 추진 중임

- ▶ 특히, 중국이 현 무역전쟁 국면에서 대북제재 공조를 지렛대 삼아 미국에게 양보를 얻어내려는 시도를 트럼프가 ‘중국 배후설’로 맞받은 형태라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
  -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이를 활용해 美北 협상에서 시간을 끌며, 중국을 통한 제재 이완을 얻는 등 이익 극대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임
- ③ 북중 밀월관계 강화로 미국의 대북협상 주도권 약화 가능성
- ▶ 북한 교역에서 對中 의존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인 바, 중국이 대북제재에서 이탈하게 되면 실질적인 對北 경제적 압박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임
  - ▶ 한편, 韓美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만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큰 선물을 내어줘 향후 가용할 협상카드는 제한적인 상황
    - 반면, 북한에겐 △핵무기 일부 폐기 및 반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 △HEU 시설 가동 중단 및 폐기 등 수많은 협상카드가 잔존
  - ▶ 더 심각한 문제는 향후 본격적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북한은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한미 동맹 해체 등의 대가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 對北 협상에서의 주도권 약화가 우려
    - ※ 7.16(月) 북한은 대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위해 남한의 군사 훈련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

## 4 대응방안

- ◆ 지금부터라도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
  - ▶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 협상하도록 만드느냐에 따라 비핵화의 성패가 결정되는 바, 북한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제재를 해제하는 것만으로도 CVID를 완수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 북한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란 중국의 동참 下 대북제재가 경제붕쇄 수준으로 강화되고, 그래도 버티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활용하는 것임
  - ▶ 그러나 현재는 美 본토 위협의 핵능력 제거(ICBM)만으로 제재 해제와 경제지원, 그리고 한미동맹 약화와 평화협정 등을 다 얻어낼 수 있는 등 북한이 주도권을 확보한 상황
  - ▶ 이에 더 늦기 전에 다시 2017년과 같은 중국 동참 下 제재 강화와 미국의 최대압박을 재개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여건을 조성해야 함

- ◆ 다음, 북핵 협상시 양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하는 비핵화 전략의 재정립이 필요
  - ▶ 비핵화 협상의 성패는 우리가 요구하는 ‘북핵 폐기’와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을 놓고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있음
  - ▶ 양보 가능한 것은 제재 해제 및 경제지원과 한미동맹에 영향 없는 美北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 이므로, 국제 비핵화 사례를 면밀히 검토 후 그에 준하는 정도로 대응
  - ▶ 그러나 한미동맹을 와해하는 것과 평화체제가 외교적 차원을 넘어 안보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음을 명확히해야 함
- ◆ 마지막, 문재인 정부는 중재자라는 애매한 스탠스를 정리하고 한국의 역할을 당사자로 전환해 북핵 협상을 적극 나서야 함
  - ▶ 한국의 역할을 美北을 연결시켜 주는 것만으로 한정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간 조율 하에 우리만의 북핵 해법을 마련해 협상의 액터로 적극 참여해야 함
  - ▶ 이와 함께, 당사자의 관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재평가하고, 한미간 철저한 공조 하에 공동 해법 및 협상 전략의 마련이 필요
    - ※ 북한이 종전선언을 갑자기 속도감 있게 들고 나온 것은 한미 공조 약화 전술일 수 있는바, 한치의 빈틈도 없는 협상전략 마련이 필요



**이슈브리프 ISSUE BRIEF** (IB 2018-14)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종인 편집위원: 김원표·이윤식 간사: 김영현·김신의

발행처: 여의도연구원 TEL: 02.6288.0502 Website: [www.ydi.or.kr](http://www.ydi.or.kr)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4층

발행일: 2018년 7월 26일 디자인·인쇄: 원기획

〈이슈브리프〉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